

고용 안정과 일자리 지키기

새누리의 진단

- 최근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가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, 이들 대부분은 노후 준비를 못한 채 은퇴를 맞이하고 있어 당장 생계가 막막한 경우가 많음.
- 일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힘겨워 하는 중·장년층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중·장년층 대상 일자리 대책이 필요함.

새누리의 약속

-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정년을 60세로 연장
- 경기변동에 대비한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
- 대규모 정리해고시 고용재난지역 선포
- 중장년층 교육훈련 확대

새누리의 실천

- 「근로기준법」의 정리해고 제도 관련 규정 개정
- 고용재난지역 선포시 예산지원 규정 등 신설
- 60세 정년 법제화를 위한 「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개정
- 장년층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예산 등 관련 예산 반영

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

새누리의 진단

- 직장과 지역간 보험료 부과방식에 차이가 있어, 직장에서 지역으로 혹은 지역에서 직장으로 이동시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여 가입자 불만 발생
- 특히 직장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이동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 1년의 유예기간(임의계속 가입기간)을 두어 낮은 보험료인 직장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짧은 적용기간에 대한 불만 제기

새누리의 약속

-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보험료 경감방식을 유지하되,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추진

새누리의 실천

-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의 임의계속 가입기간 규정을 개정(2013년)

사교육비 부담 낮추기

새누리의 진단

- 사교육비 때문에 가계가 휘청이고, 삶의 질은 저하되고, 노후 대비조차 못하는 실정

새누리의 약속

- 「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」을 제정해서, 각종 학교 시험과 고교·대학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, 위반시 강력한 불이익 조치
-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학교별 다양화를 추진하고, 초등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무상화
-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, 정시는 수능위주로 대입제도의 단순화 추진
- 수능과 논술 시험을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하여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한 체제 구축
- EBS 차세대 교육서비스 체제 구축을 통해 국어·영어·수학 등 주요 교과의 수준별·영역별 프로그램 다양화

새누리의 실천

- 「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」 제정
-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무상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

가계부채 부담 줄이기, 신용회복지원 늘리기

새누리의 진단

- 현재 많은 가정이 가계부채로 인한 높은 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음.
- 아울러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음.
- 지금이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임. 그러나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, 실현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

새누리의 약속

- 320만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
 - 18조원 규모의 '국민행복기금'을 설립
 - 금융회사 및 민간자산 관리회사가 보유한 개인의 연체채권을 매입하고, 신용회복 신청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하여 장기분할 상환 유도
 - 채무조정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전제로 일반채무자는 50%, 기초수급자처럼 어려운 분들은 70%까지 채무를 감면하여 상환부담 대폭 완화
- 서민의 과다채무 해소
 - '국민행복기금'을 활용하여 1인당 1,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%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가지고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해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
 - 신용회복위원회의 '프리 워크아웃제도'의 적용대상을 확대(현행 채무불이행 기간 연속 30일 초과 90일 미만 → 1년 이내 연체일수 총 1개월 이하)하여 다중채무자의 조기 신용회복을 지원

-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민간 자산관리회사에 매각시 채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제도화하여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 보호 강화

■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

-학자금대출 연체채무의 경우 '국민행복기금'이 일괄 매입하여 취업 후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추심 중단

-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원금의 50%까지 감면해 주고 장기분할상환하도록 부담 경감

-2010년 시행이 시작된 '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(ICL)'이전 제도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서, ICL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

■ 개인신용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 제고

-금융이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고, 이의제기 경로를 제공(항변권)

■ 대부업을 금융감독망에 포함하여 소비자 보호강화

-대부업을 금융감독원의 공적 감독대상으로 편입하고, 일정한 자본금 및 인적 요건을 부과하여 무자격 업체 난립을 방지

-중소 대부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하여 소형업체 난립에 따른 경쟁질서 훼손과 소비자 피해 방지

-대부업 자율규제기구를 지정하고, 금융감독원 업무를 분담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감독체제 구축

■ 금융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한 법규 및 관행 개선

-약탈적 대출, 불법추심 등 대출관련 금융회사와 추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출소비자 보호법규 도입

- 보험, 신용카드 등 각종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근절을 위한 법규를 도입
- 연금상품 운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, 투자자의 금융회사 성과비교가 용이하도록 비교 공시체계 구축
- 금융수수료, 영업관행 등을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정비

새누리의 실천

- '국민행복기금' 설립
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개정
- 「대부업법」 개정
- 대출소비자 보호법규 도입(현행 관련개별법규에 도입하거나 별도 입법)
- 금융위원회 내 한시기구를 설치하고 금융관행 개선 추진

통신비 부담 낮추기

새누리의 진단

- 우리나라 휴대전화 가입자는 5천만명으로 한 가족이 평균적으로 쓰는 통신비는 한 달에 15만원을 넘음. 이는 최근 3년 사이에 통신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결과임.
- 통신비에 따른 서민가정의 고충을 줄이기 위해 통신요금의 지속적 인하와 통신업체의 요금 결정에 투명성을 강화해야 함.

새누리의 약속

-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, 소비자선택권 강화, 서비스 경쟁 활성화 및 보조금규제 강화 등으로 요금 인하를 유도하여 통신비용 부담 경감
 - 모든 이동요금제에 보이스톡 등 무선인터넷전화(m-VoIP) 허용
 - 이동통신 선불요금 이용자 비중 확대
- 요금인가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
- 데이터 기반 요금제도 실현
- 단말기 유통경로 다변화와 보급형 스마트폰 생산 및 보급 확대 등으로 스마트폰 가격 인하를 유도
- 스마트폰 유통시장에서 이용자간, 지역간 과도한 차별 금지

새누리의 실천

- 2013년 「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」 제정
- 「전기통신사업법」 개정

집 걱정 없는 세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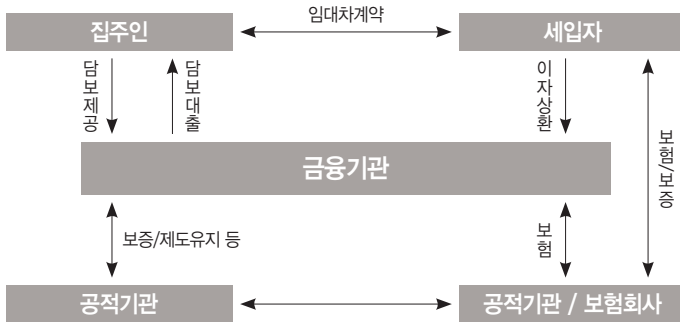
새누리의 진단

- 주거안정은 서민생활 안정의 기본토대이자 국민행복을 위한 필수조건
- 이제는 주택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임.

새누리의 약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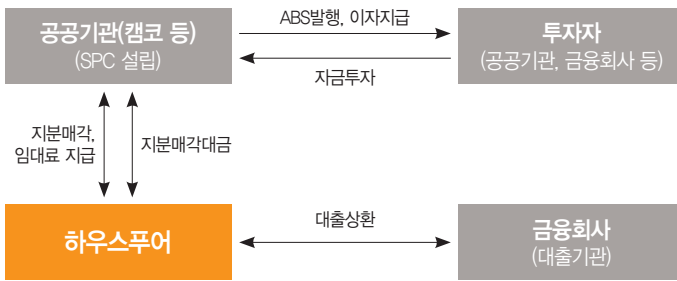
- 새로운 임대주택정책, ‘행복주택 프로젝트’
 -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, 그곳에 아파트·기숙사·교통(역)·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 정책
 - 낮은 토지매입비용으로 인해 기존 시세에 비해 1/2~1/3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주택공급
- ‘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’ 도입
 - 집주인(임대인)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, 동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(임차인)가 납부·부담하는 제도
 - 대상 :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소득자로서 일정금액(수도권 3억원, 지방 2억원) 이하 전세의 경우
 - 대출부담하는 집주인을 위한 세제지원
 -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수입에 대한 과세 면제
 - 집주인에 대해 대출이자납입 소득공제 40% 인정

[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개념도]



- 과도한 부채상환 부담을 안고 있는 주택보유자를 위해 ‘보유주택지분매각 제도’ 도입
 -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매각한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제도
- 50대 하우스푸어의 부담완화를 위해 ‘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’ 도입
 -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, 일시금으로 받은 주택연금으로 현재의 부채상환에 사용하게 하는 제도

[지분매각제도 기본개념도]



새누리의 실천

- 지분매각제에 필요한 각종 제도 및 법령 정비
- 주택연금과 관련된 제도 개선
-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개정

영구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

새누리의 진단

- 정부재정 85% 입주민부담 15%가 투입된 영구임대주택은 입주민 65% 이상이 기초수급권자, 독거노인, 장애인, 새터민 등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단지
- 최대 취약계층의 집단거주지인 영구임대주택은 이웃과 단절되거나 고립되어 '도시의 섬'으로 불림

새누리의 약속

- 공공이 임대주택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메커니즘 구축
- 영구임대주택단지 난방용 유류(가스료) 부가세 면제
- 영구임대주택단지 사회복지사 및 공익근무요원 배치 적극 검토

새누리의 실천

- 공공재이자 사회복지재인 영구임대주택관리의 공적역할 제고 강화 및 영세민 주거안정

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

새누리의 진단

- 현재 1년 동안의 총 본인부담 진료비가 최하위소득 계층은 200만원, 중위 계층은 300만원, 상위계층은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본인부담금액을 국가에서 대신 납부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도를 운영 중
- 그러나 저소득계층 및 중산층의 경우는 아직도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본인부담을 납부하고 있어 불만이 제기

새누리의 약속

- 소득수준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
 - 최하위 계층부터 50만원, 100만원, 150만원, 200만원, 250만원, 300만원, 350만원, 400만원, 450만원, 500만원의 상한금액 설정
- 제도 도입시 현행제도에 비해 67만명이 추가로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

새누리의 실천

- 현행 3단계의 상한제를 10등급 상한제로 구분하는 종합계획 및 소요재원 충당방안 수립(2013년)
 -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추진
- 「건강보험법시행령」 개정 추진